

## “원청교섭 · 업종별 공동 투쟁으로 더 크게 뭉친다”

61차 정기대회 열고 올 사업계획 의결 ... 산별교섭에서 ‘AI 도입 시 고용 보호’ 요구



금속노조가 원청교섭 쟁취와 업종별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. 노조는 사업계획 확정으로 2026년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다.

금속노조는 3일 오후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14기 1년 차 사업계획을 확정했다. 대의원 577명(재적 대의원 844명)이 참석해 이날 대대를 성사했다.

**“업종별 공동 투쟁, 원청교섭 열고  
금속노조 조직혁신으로”**

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“임금인상 의제에만 머무르지 말자. 금속노조는 올해 원청교섭과 업종별 공동 투쟁에 힘 쏟고 산업 변화에 적극 개입해 자본이 만든 경계를 넘을 것” 이라고 결의했다.

이어 박상만 위원장은 “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노조 시스템을 재정비해 조직을 혁신하고 투쟁력을 높ی겠다” 라고 밝혔다.

금속노조 올해 사업 방향 첫 번째는 ‘업종별 공동 투쟁 체계 구축’ 이다. 업종별 공동 투쟁으로 교섭력을 높여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. 기업별 교섭만 진행하는 다수 노조 단위를 업종별로 묶어 각 기업별 교섭에 업종별 공동 요구를 제출한다.

두 번째 주요 사업은 원청교섭 공동 투쟁이다. 금속노조는 사내하청·사내용역·자회사 노조 단위가 추진할 ‘원청교섭’ 을 총력 지원한다.

조직혁신도 올해 노조 핵심 사업이다. 노조는 4월 열릴 중앙위원회에 조직혁신 소위원회 구성 계획을 제출한다. ‘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계획(금속노조 규약 부칙)’ 을 토론한다.

**AI 도입 시 고용 보호, 금속산업최저임금  
1만 1천540원 등 교섭 요구 결정**

대의원들은 2026년 교섭 방침과 요구안도 확정했다. 각 지부와 사업장은 4월 14일 산별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단체교섭에

순차 돌입한다.

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로 ▲인공지능(AI)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▲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▲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▲202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,540원(월 통상임금 2,608,040원 중 높은 금액 적용) 등을 결정했다. 이 중 AI 도입 및 고용 보호, 정년 연장 두 가지 요구는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도 사용자 측에 제출해야 한다.



지부 집단교섭에서는 ▲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 ▲월 기본급 149,600원 정액 인상 요구(정기 호봉승급분 제외) 등을 다룬다.

사업장교섭 필수 요구는 ▲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▲중앙·지부집단교섭 참가 등이다. 특히 원청 사용자성 인정,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활동 및 고용 보장, 고용안정 등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는 금속산별협약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다. 노조는 지난해 노조법 2조 개정과 이달 10일 법발효를 계기로 올해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.

원청교섭 추진 사업장은 사측에 ▲전문 ▲

충척(교섭 및 체결 권한, 협약의 준수·이행 의무) ▲임금(임금인상, 임금지급 연대책임) ▲고용안정(업체 변경 시 고용·근속·단협 승계) ▲노동안전보건(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) 등을 요구키로 했다.

노조는 이날 14기 감사위원을 선출하기도 했다. 6명 뽑는 감사위원 일반명부 간접선거에 김상민(현대차지부), 이형범(현대차지부), 손세광(현대차지부), 박현수(현대차지부), 윤동현(현대차지부), 김경호(기아차지부) 등 6명 조합원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.

노조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하며 ▲원청교섭 쟁취 ▲초기업 교섭 활성화 ▲노동기본권 쟁취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. 대의원들은 “기업 울타리를 넘어 더 크게 단결·연대하고 산별노조 강화 발전으로 나아가자”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 이어 미국·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성명서도 채택했다.

한편, 금속노조는 올해 대의원대회를 4월과 10월 두 차례 더 연다. 4월 27일 대의원대회 때는 각급 교섭 단위 시기 집중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. 업종별 공동 요구안과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투쟁 세부 계획도 4월 대의원대회에서 토론한다. 10월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정부 총파업·총력 투쟁 계획을 정한다.

